

공공개혁,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 '박근혜표 474' <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 이후 압동부처 이틀으로 참고자료를 내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 추진전략마다 3개씩 모두 9개의 과제를 두고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분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담화문과 정부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3대 추진전략과 9대 과제 및 통일시대 준비 과제 내용을 요약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를 담았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요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공공기관 임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임찰비리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근절=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 수의계약·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점검,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방해 등) 등에 대한 점검.

공공기관 임찰비리·불공정 거래 근절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 위반 유형을 정리·유형화해 배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연구개발(R&D) 및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과목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부당당가 인하 및 기술유용,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임증이 쉽지 않은 손해배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에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고용보험 대상 확대=보험모집인·학습자 교사,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험을 적용 ▲실업급여 체계 개선=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향.

역동적인 혁신경제

3대 과제로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전 과정에서 지원 강화와 규제 혁파로 창조경제 구현, R&D투자 확대 및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 투자, PTA 확대 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트와 콘텐츠 등의 진출확대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이 제시됐다. 이어 주요 실행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해 지역경제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육성 ▲기술은행 설립=국내 대기업·출연연구소 등이 보유 중인 미 활용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 풀

창업지원·규제혁파로 창조경제 구현

(pool)로 구축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4조 원 재정지원=창업자 1만3000명 육성에 1조 598억원,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 2000억원, 재창업 지원에 7730억원 지원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 재정 4600억원과 민간매칭 3000억원을 포함, 총 7600억원 규모로 조성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정부지분 40%와 외국 투자자 등 지분 60%로 구성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해 외국인 시작으로 유망한 국내 기업을 발굴·육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농축수산물과 소상공

기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대 분야를 설정해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5배로 대폭 확대 ▲한국 연구자 펠로십(Korea Research Fellowship)=Korea Research Fellowship(가칭)을 만들어 재외동포 등 해외 우수인재 3만7000여명을 2017년까지 유치 추진 ▲특허박스 중견기업 확대=중소기업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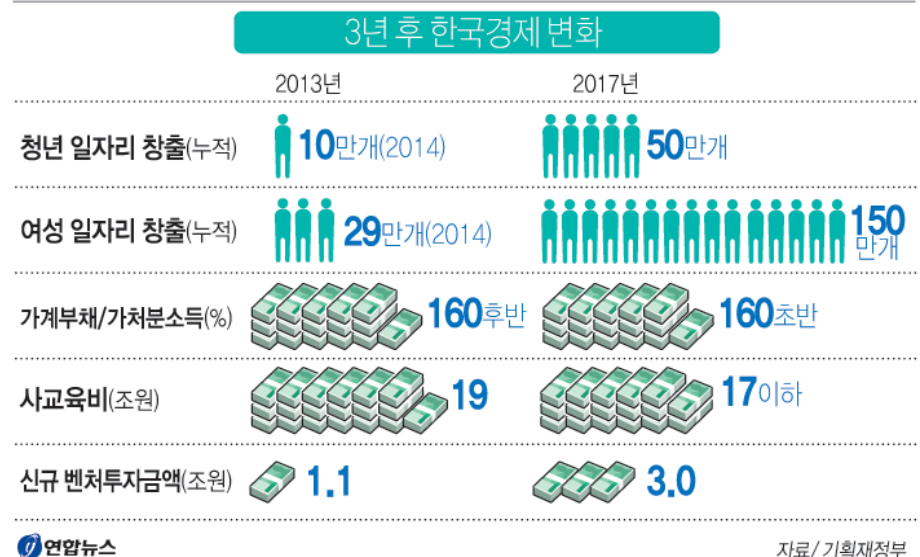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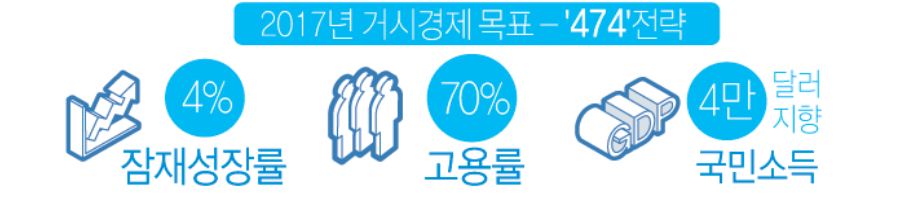
내수·수출 균형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등 내수 제약요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수(소비)기반 확대하고 규제혁파, 5대 유망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투자 결집물체 등을 통해 투자여건 확보하는 한편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한다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실행과제를 내세웠다. ▲가계부채 관리=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를 5%포인트 인하, 고액전세대출 보

가계부채·전세값 상승 등 최우선 억제

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의 가계부채 구조를 변경 ▲임대시장 선진화=전세→월세로 전환해 월세시장 확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축소,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 ▲규제 개혁=연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 규제 신설 시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높여 규

제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 규제의 존속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확대, 규제정보 포털사이트 개편 ▲선취업 후진화 정착=일·학습 병행제도와 현실실습 간 시너지 제고를 통한 선취업 촉진,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 재직자 특별전형1)·계약학과2) 확대 등 후진화 활성화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완화(7년→3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제도 신설



준비위, 민간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통일 한반도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

통일시대 준비...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연초 제시한 '통일대박'의 화두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구성을 밝힌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통일 논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준비위는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통일 준비를 하는 사회적 합의의 기구의 성격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와 관련,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선거의 공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A man in a suit holding a sign with a peace symbol.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일시 및 장소, 대상, 개설강좌, 강좌명, 시간.